

서 면 질 문 서

김정태 의원 (영등포구 제2선거구, 민주통합당)

【문승국 행정 제2부시장에 대한 질문】

■ 2030도시기본계획 수정보완 수립에 대하여

1) 2030 도시기본계획 보완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미래 지향,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수립이라는 취지에 동감합니다.

지난해 수립된 기존 2030도시기본계획은 최초 수립된 2000기본계획에 이은 1996년의 2011계획 이후 지속된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인 ‘생활권별 균형발전’을 위한 1도심-5부도심-11지역중심-53지구이라는 다핵구조형 공간구조를 3핵(도심, 영등포-여의도, 강남)-3부핵-13거점-50지구로 개편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까?

2)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지역거점이 되던 2011계획의 54지구, 2020계획의 53지구, 2030계획의 50지구는 모두 역세권지역을 중심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일반주거→준주거·일반상업)하여 자치구별로 지구 중심의 육성과 환경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지가의 상승, 고밀 난개발 등 적지 않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세권 중심의 지역거점 공간 구조개편작업도 전면 재편하겠다는 것입니까?

3) 박원순 시장께서 "현재의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등 4개로 나뉜 단조로운 용도지역 체계로는 도시 미래수요를 도시계획에 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현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방향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4)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의 개정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의 개념부터 바뀌야 합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이라는 기능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편의관점, 쾌적한 환경조성에 맞추어야 하지않겠습니까?

5) 그런 의미에서 준공업지역의 용도혼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여의도의 세배 넓이인 276만4,500여㎡가 있지않습니까? 영등포, 구로, 금천, 성동구 등 6개구에만 있고, 영등포구에 전체 34.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의 근간이 1934년 일제 총독부의 조선시가지계획령 아닙니까. 이것이 1939년 상업, 공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196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의 공업지대가 현재의 준공업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이 준공업지역의 공업기능은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자료화면 몇 장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모두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아파트 단지가 성장잠재력이 될 산업기반단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적상의 준공업지역 총량 유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전임 집행부에서는 준공업지역 관리종합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 관리 종합정책은 지속되는 것인지?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집중지역의 용도 혼재에 의한 쾌적한 도시환경 저해요인의 해소방안은 있습니까?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질문】

시장님, 지금까지 질문과 응답 경청해주셔서 감사 드리면서, 시간관계로 박원순 시장님께는 서면 질문 드립니다.

1) 역사 발전은 인간의 의지가 좌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민을 주인을 모시겠다는 서울시 행정은 결국 저희 시의원을 포함한 서울시 공직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법의 맹점에서 비롯된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문제는 법개정 이전에 행정재량권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 였다고 봅니다.

여전히 시민은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관의 눈치를 봅니다.

이런 관행이 일시에 해결되지 않겠지만, 혁신과 소통을 강조해주십시오.

2) 서울시 소속 위원회 문제 심각합니다. 책임소재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었던,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뿐만 아닙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역시 서울시는 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 재거 검토한바로는 한번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정책 담당자는 위원회 뒤로 숨고, 위원들은 사회봉사 차원에서, 지식의 사회 환원차원에서 서울시 의지에 따라주었다는 이유를 댑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두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시장님과 저희 시의원들이 시민에게 평가받고, 언론의 감시를 받고, 결국은 역사의 심판을 받듯이 지금의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책임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다못해 금전적 배상책임 까지 규정하십시오.

둘째, 시장님께서 위촉장을 수여하실 때 반드시 지식인의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성실히 임무수행할 것을 선서하도록 하십시오.

서울시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정비 자문을 2년간씩이나 보류하고, 지연하고, 급기야 2년전으로 되돌아간 것을 분명한 서울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에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4) 2000년부터 서울시 시내버스를 비롯해 마을버스, 청소차량, 여기에 전세버스, 관광버스까지 CNG 버스 차량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대당 1,800만원 달합니다. 지난 12년간 직접 지원비가 4,000여억원, 취득세, 등록세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간접 지원비가 1,500억원 등 6천여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덕분에 서울시 대기 환경 개선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퍼붓기씩 보조금 정책의 패해는 막심합니다.

첫째, 에너지시장 질서를 왜곡했습니다.

둘째, 정책이 기술진보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셋째, LPG 가격 인상에 따른 택시파업에 보듯이 에너지의 일방화를 가져왔습니다.

넷째, 환경부 경제성 평가 역시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정책을 펴는 동안 EU는 배기가스 규제정책을, 미국은 연비 향상 유인정책을 펼쳐 상당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오래 2012년도가 보조금 지급 일몰년입니다.

지난 2년간 저의 지적에도 서울시는 전세버스, 관광버스로 그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판단과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도서관 정책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시장님의 '책 읽는 서울' 종합계획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주에 직접 발표하신다는데, 기대가 큼니다.

다만, 서울시 지역거점도서관 정책의 백지화 문제입니다.

시장님, 서울시의 문화향유기회에 대한 지역간 격차가 참으로 큼니다.

제가 제2부시장님과 질문에서 제기한 준공업지역의 세분화 또는 현실화가 왜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용도가 혼재된 준공업지역에는 사회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의 34.3%가 영등포에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청에서 어렵게 설득하여 구청사 신축부지인 4천여평의 공공용지를 문화기반시설 부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옛날 경성방직 부지로 여건이 좋은 입지에 있습니다.

이에대한 협의는 계속하겠습니다만, 도서관 보급과 문화 향유기회의 확대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